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제고와 상생협력을 위한 수도권 제도개선 과제

변창흠 교수(세종대학교)는 지난 2011년 12월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수도권 관리정책의 평가와 대응과제 토론회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제하였다. 이 연구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각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수도권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시행되어 온 수도권 정책을 중심으로 두 지역 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내용과 한계를 평가하고 상생을 위한 수도권 관리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요약·정리하였다.

○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과 입주가 어느 정도 진척되는 2012년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수도권 기능과 고급인력의 유출을 이유로 수도권에 대한 기존의 규제의 틀을 전면적으로 해제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수도권 인구비중의 증가로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의 수도 더욱 늘어나 비수도권 지자체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를 대비하여 수도권 문제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시기보다 절실해지게 되었다. 수도권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관념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현황과 문제인식, 수도권 관리를 위한 대안과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더욱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지자체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자체와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조사하고 협의하여 공동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 수도권에서 지난 해 6.2 지방선거와 10.26 보궐선거를 통해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장하는 개혁적인 지자체장들이 대거 당선되었다. 특히 시민후보였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을 계기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역할분담을 위한 협의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수도권 지자체나 수도권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이 지방 소재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도권의 계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수도권 지자체가 수도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사실상 활동을 정지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재가동하거나 재편해야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 지자체장들과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의 관리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 이와 아울러 수도권에서도 그동안 양적인 팽창과 개발이 각종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거 불안정, 환경훼손 등의 문제점을 유발했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대안적인 개발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마을공동체 살리기, 대안적인 재정비모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결코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해 주지 못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과 관리 모형이 정착되는 경우 수도권 지자체들도 과거의 개발과 성장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성장관리 모형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형은 장기적으로 지방과 상생·발전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참조자료 : 2011.12.6 수도권 관리정책의 평가와 대응과제 토론회 자료 정리

작성 : 고승희(기획조정연구실 기획조정팀장)
문의 : 041-840-1120 (kosh@cdi.re.kr)